

정청래 법사위원장 “형소법, 12일 본회의 통과시킨다”

유튜브 방송 출연…“대법관 30명 증원법도 원칙대로 처리해야”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은 9일 대통령 당선 시 진행 중인 형사재판을 정치하도록 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 문제를 두고 “재판중지법”을 12일에 (본회의에서) 통과시킨다”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이날 ‘매불쇼’ 유튜브에 나와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 재판부가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을 규정한 헌법 84조를 적용해 파기환송심 기일을 미룬 결정을 언급하며 이같이 밝혔다.

정 위원장은 법원의 결정에 대해 “우리가 이렇게 딱 하나 줄 테니 재판중지법을 통과시키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는 시그널로 읽힌다”며 “(이 결정

과) 관계 없이 12일에 통과시키자고 박찬대 원내대표 등과 오전에 회의를 했다”고 전했다.

이어 “대선 전에 형사 절차가 (헌법) 84조에 의해 중지된다고 했으면 얼마나 좋았겠나”라며 “지금까지 계속 눈치를 보다가 정권이 교체되니 자기가 시혜를 베풀듯 하는 것은 안 된다”고도 했다.

정 위원장은 현재 14명인 대법관 수를 30명으로 늘리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대법관 증원법) 처리를 두고는 “개인적으로는 12일 본회의에서 원칙대로 처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아침 회의에서 ‘법원이 이렇게 윤택적으로 나오니까 우리도 윤택적으로 나가겠다’ 하

면 안 된다(고 했다)”며 “12일 본회의 하루 전에 법사위를 열어야 해서 11일 오전 11시로 회의를 열테니 준비하라고 보좌관에게 얘기했다”고 밝혔다.

대법관 증원법은 지난 4일 법사위 법안심사소위에서 야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여당인 민주당만의 표결로 의결된 바 있다.

애초 같은 날 법사위 전체회의까지 열어 법안이 처리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으나, 민주당은 회의를 열지 않았다. 이에 정치권에서는 여론의 반발을 우려해 속도 조절에 나선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다만 정 위원장은 “대통령실에서 이런저런 얘기가 있으면 그건 제 맘대로 할 수는 없지 않나”라며 “저는 지금까지 당 지도부와 호흡을 맞춰 왔다”고 덧붙였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지방정가 라운지

“광주시민, 경제난에 숨진 중장년 매년 급증”

정다운 광주시의원 “올해만 91명”

광주에서 경제적 이유로 숨진 사람들의 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정다운(북구 2선거구)광주시의원에 따르면 올해 광주지역에서 스스로 목숨을 포기한 지역민이 91명으로 집계됐다.

지난 2022년 358명이었지만, 2023년 388명으로 늘었고 지난해에는 411명에 달했다.

이들 중 경제적 이유로 인한 비율은 2022년 23.5%에서 2024년 31.6%까지 꾸준히 증가했다. 이들 중 40%는 40~59세 중장년층으로 가장으로 분석됐다.

광주시는 최근 3년간 자살예방 관련 사업에 약



22억 원을 집행했으며, 지난해에만 정신응급대응체계관리 등 6개 사업에 9억 여원을 투입했다.

정 의원은 “경제적 요인에 따른 자살 증가는 고용 불안 등 복합적인 사회 위기에서 비롯됐다”면서 “최근 대우위니아 법정관리·파산과 금호타이어 화재와 같은 지역 사회 내 악재들이 끊이지 않고 있어서 수 년 내에 자살을 상수 위험이 현실화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중장년층과 경제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대책 강화와 지속가능한 사회안전망 구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광주 영유아 급식 방사능 검사 법적 근거 마련

최지현 광주시의원 조례안 의결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가 방류된지 2년을 앞두고 광주지역 영유아 급식에 대한 방사능 검사를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더불어민주당 최지현(광산 1선거구)광주시의원이 대표발의한 ‘광주시 영유아시설 급식의 방사능 등 유해물질 안전 식재료 사용 지원 조례안’이 9일 환경복지위원회에서 원안 의결됐다. 조례안은 16일 본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입법취지는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2023년부터 방사능 오염수가 해안에 방류와 관련, 영유아를 키우는 부모들의 불안해소와 안전하고 질 좋은 급식을 보장하기 위해서다.



조례안은 영유아 시설 급식 식재료에 대해 정기 또는 수시로 방사능 등 유해물질 표본검사를 실시하고, 허용기준을 초과한 경우 즉시 식재료의 사용을 중단하고 관계자에게 통보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검사 항목과 방식 등을 심의하기 위한 심의위원회 설치, 급식 종사자 교육 강화 등 조항도 포함돼 있다.

최 의원은 “성장기 영유아는 환경유해물질에 더욱 취약한 만큼 철저한 검사와 과학적이고 투명한 사전예방체계를 통해 영유아의 급식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강조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국민의힘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과 원내대표직 사퇴를 선언한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악수한 뒤 각자의 자리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힘, 사법부 이 대통령 재판 연기 비판

김용태 “정치적 대응 나서겠다”

국민의힘은 9일 법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파기환송심을 사실상 무기한 연기하기로 한 데 대해 “대한민국 사법부의 역사에 큰 오점으로 남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헌법 84조는 면죄부가 아니다. 이미 기소된 형사사건 재판까지 중단하라는 것이 아니고, 있는 죄를 덮는 도구는 더더욱 아니다”라며 “의원들과 함께 헌법 질서를 지키기 위한 입법적·정치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도 의원총회에서 “대통령 임기 초반 권력이 무섭다는 이유로 판사가 스스로 사법부 독립성을 포기한 셈”이라며 “권력의 바람 앞에서

미리 알아서 누워버린 서울고법 판사의 판단은 두고두고 사법부 흑역사로 남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강전에 대변인은 논평에서 “파기환송심 재판부의 결정에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며 “이 대통령의 다른 사건 재판을 진행 중인 재판부들은 재판 계속과 관련해 원칙에 입각한 결정을 내려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도 사법부의 판단을 비판하는 국민의힘 의원들의 글이 잇따랐다.

한동훈 전 대표는 “스스로 사법부 독립을 꺾은 서울고법 형사7부의 결정은 대한민국 사법부의 역사에 큰 오점으로 남을 것”이라며 “민주당과 서울고법 형사7부 주장대로 대통령이 되면 진행 중인 재판이 중단되는 것이라면 헌법 68조의 ‘판결로 대통령 자격을 상실한 때’라는 문구는 존재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안철수 의원은 “오늘 서울고법의 판단은 헌법을 위반하고 권력에 무릎을 꿇은 것”이라며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한 것이 맞습니까?”라고 반문했다.

나경원 의원은 “오늘 사법부의 태도는 대한민국 헌법의 후퇴 선언이다. 대한민국 헌정사에 ‘사법의 정치 예측’이라는 씻을 수 없는 오점을 남겼다”며 “이제 민주당의 재판정지법도 필요 없게 됐다. 유권 무죄, 무권유죄 시대가 드디어 열렸다”고 비판했다.

당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은 “개별 재판부의 결정일 뿐 아직 최종심인 대법원의 결론이 아니다. 검찰은 항고를 통해 대법원의 최종 결론을 구해야 한다”며 “법리를 잘못 해석한 재판부를 기피 신장하는 방법도 있다. 법리적으로 명확히 하자는데 민주당도 반대할 명분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날 서울고법 형사7부는 오는 18일로 예정됐던 이 대통령의 파기환송심 기일을 헌법 84조에 따라 연기하고 추후지정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전남도 문화 예산 불용 반복, 통합관리 시급”

조옥현 전남도의원

조옥현 전남도의원(민주·목포2·사진)이 “지난해 문화융성국 불용액은 24억 6000만원으로, 불용과 정산 지연이 반복되는 예산 운영 실태는 더 이상 간과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지난 5일 열린 제391회 제1차 정례회 문화융성국 결산 승인 심사에서 “매년 반복되는 사업 포기 사태는 사전 타당성 검토가 부실했음을 의미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조 의원은 지난해 문화융성국 불용액 중 77%가 문화예술과에 집중됐고, 특히 ‘생활문화센터 조성’, ‘작은도서관 전환’ 등 지역문화기반시설 사업이 2년 연속 지체체의 사정으로 추진되지 못하며 예산이 불용되는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이어 “도립국악단 운영 지원 예산 중 5억 2000만 원이 집행되지 않았다. 지속적으로 정원 충원을 요청했으나 실현되지 않았고, 결국 예산은 집행잔액으로 전락했다”며 “꼭 필요해서 편성한 예산이 적시에 쓰이지 못한 것은 국악단 운영에도 악영향을 주는 동시에, 예산의 신뢰성과 정확성을 떨어뜨리는 결과로 이어졌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그러면서 “두 차례 이상 정산 지연이 발생한 기관에 대해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사업 타당성부터 정산 회수까지 전 주기를 통합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 정비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시를 꽃처럼 피워 주변을 시꽃으로 밝히고 싶습니다.”

사람 때문에 힘들고 사람 때문에 상처 받아도
시가 만나야 할 궁극적인 대상은 사람입니다.

조선의 시인 문예지 ‘시꽃피다’ 창간



조선의 시인

농민신문신춘문예 당선, 기록신춘문예 당선, ‘미션21’ 신춘문예에 당선,

상상인 작품상, 송순문학상, 김만중문학상, 거제문학상, 신석정문학상 등 수상.

‘아직 도달하지 않은 입의 문장’, ‘빛을 소환하다’, ‘꽃 향기의 밀서’, ‘꽃으로 오는 소리’ 등 발간.

〈시꽃피다〉 광주 시장창 강사, 〈시꽃피다〉 전북지역 시장창 강사, 서울 성동구 평생교육원 시장창 강사, 담양문화원 시쓰기 강사

